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유 재 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도시 T/F팀장)

1. 현 황

투자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패턴이 크게 변하면서 투자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의 우리경제의 투자패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외환위기에 본격 돌입한 1998년 이후 설비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를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설비투자가 1996년 78조원을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절정기인 1998년에는 41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후 지난해까지 8년째 199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투자는 오히려 정체되었다. 투자의 경제성장에 기여는 작아지고 오히려 잠재성장력을 낮춘 셈이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생산(GNP)도 1996년 11,385달러를 기록한 후 1만 달러 이하로 추락하여 6년째인 2002년에야 다시 1만달러를 회복하였다.<<표-1>> 투자와 함께 성장을 견인할 소비도 48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380만을 웃도는 신용불량자로 인해 팍막혀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준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당장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미 우리경제의 절대적 자본스톡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떨어져 잠재성장능력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부진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어 고용이 중대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투자부진과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을 우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표-2>>

한편 산업경쟁력면에서도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도 언제 그 경쟁력을 상실할지 알 수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력 있는 제품 산업들을 집적화(클러스터)하여 세계적인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극심한 견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심 산업과 품목이 중심이 되는 산업집적체의 구축이 시급하다. 경쟁 또는 협력하는 기업, 하도급업체, 용역업체, 교육기관, 연구

<표-1> 우리나라 시설투자 및 1인당 GNP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시설투자(조원)	71	78	70	41	55	74	67	73	71
1인당GNP(달러)	10,823	11,385	10,315	6,744	8,595	9,770	9,000	10,013	-

주: 시설투자는 2000년 가격기준, 1인당 GNP는 1995년 가격기준(자료: 한국은행)

〈표-2〉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제조업	19.01	18.18	13.65	17.15	-0.01	2.41	-1.54	-2.22	1.67

자료 : 한국은행

기관 등을 지리적으로 인접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도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의 주체인 기업가의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래의 핵심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신성장 전략

지금과 같이 투자마인드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투자활성화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의 산출량은 세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첫째,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다. 이 경우 생산요소에는 자본, 노동, 토지 및 자연자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생산요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된 제도이다. 기업조직, 물류체계, 통신체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생산요소를 경제에 유용한 산출물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신기술의 발명 및 혁신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본다면 총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의 양적투입을 의미하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능력, 조직경쟁력, 연구 및 개발, 체화된 기술진보 및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기업투자는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겨냥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업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만을 꾀한다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시설을 향상시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산업시설 옆에 기숙사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해주면 그런대로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가족들의 정주시설까지 고려해주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는 정주시설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레저시설을 들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정주시설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공공재인 정주시설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인 기업이 이를 계획단계에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을 동시에 계획하고 건설하는 방안이 기업도시 건설이다.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현재 경쟁우위산업의 유지와 미래 성장산업의 대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사업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얻게 될 많은 부가적 효과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규제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다. 실제 우리가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제가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가능한지 기업도시 건설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도시 건설로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일괄 해결하므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부채비율 준수 의무 배제와 대폭적인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투자,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수출이 가장 낮다.(<표-3>) 이는 최근 우리경제가 높은 수출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난이 극심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의 경우에는 높은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로 단기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이 가져올 좋은 점을 생각해 보면 성장거점도시의 건설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가 가능해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장 거점도시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이 바라고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산업시설과 배후시설이 함께 하는 미래형 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의 거점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 의료 및 여가활동이 보장되는 자립형 도시로 개발하므로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완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이다.

<표-3>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2000년)

	소비	투자	수출	합계
전산업	24.0	16.1	15.7	19.9

자료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해설

3.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가. 기업도시 개념

흔히 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도시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기업도시는 기업만의 공간이 아닌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생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기업도시란 기업이 현재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경쟁력 있는 산업중심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특히 연관산업과 연구기관 등 지원시설을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살기 좋은 성장거점도시를 구축하자는데 있다. 동시에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입주자들의 자족과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 학교, 문화 시설 등을 동시에 건설하므로써 도시건설 초기부터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문화 등 직장 이외의 문제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시켜 균형된 도시를 건설하자는 목표도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된 기존도시와 주체, 개발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①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할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③ 또한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포항, 울산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도시로 도시개발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도시개발은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기업은 시

행단계에서만 참여하였다. 생산시설 중심이나 주거 중심의 도시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도시가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획단계에서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입지의 특성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은 특정한 모형으로 한정지를 필요가 없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개발주체와 개발순서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중인 산업도시들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앞으로 개발할 도시는 철저한 산업과 정주, 두 기능을 종합한 계획하에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은 막연히 건설투자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을 집적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신성장전략이 된다.

나. 기업도시 유형

기업도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발주체별로 도시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 주도형을 들 수 있다. 개별기업 주도형은 대기업 주도로 개발하며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들의 동시 입주를 통해 일관된 산업클러스터형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는 주도하는 기업이 대기업으로 전체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컨소시엄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몇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관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단일 주도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곤란한 몇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도시를 건설하는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흔히 제3섹터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는 토지의 수용,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개발·시공·분양은 기업이 담당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둘째, 형태별로 기업도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완전개발형의 경우 백지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아무 시설도 없는 지역에 도시건설의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도시의 재구축형을 들 수 있다. 공장을 신규설립하고 주거시설을 병행, 발전시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셋째, 기능별 유형을 들 수 있다. 기능별 유형과 관련해서 산업시설을 제조업 부문만으로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서비스산업도 엄연히 산업에 속하며 문화, 레저 등도 훌륭한 서비스산업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기능별 유형의 대표적인 기업도시는 산업형 기업도시 형태이다.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관기업이 집적하여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준비하는 산업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IT산업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형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도시개발의 초기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의 도요타시, 독일을 볼프스부르크시, 우리나라의 울산시, 포항시 등도 기업이 주도가 되어 있는 산업형 기업도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레저형 기업도시를 들 수 있다. 컨텐츠, 문화, 레저 등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화,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연합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화산업으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음악의 도시인 미국 내슈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는 기업이 개발한 대표적인 문화·레저형도시이다.

기능별 도시유형으로 R&D형 기업도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생산시설에 기업의 R&D 시설을 집중시켜 고부가가치형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 R&D 센터, 교육연수원 등이 결합하는 산학연계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 도시로는



GSM 방식¹⁾의 기술로 유명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휴대폰의 핀란드 오울루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달리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Research Triangle Park)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기능별 유형으로 물류형 기업도시를 들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의 물류망을 재구축하는 방안으로 전국의 교통과 통신망이 관통하는 지역 중심의 물류형 기업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몇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취급하는 물류단지과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정주형 도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선전,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을 사례로 이러한 도시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도시 건설효과

기업도시의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또한 크다. 8년제 답보상태의 소득 1만 불대를 돌파하고 2만불시대의 벽을 넘는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실업난이 해결되어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로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마련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산업시설, 지원시설, 생활시설 등의 건설효과로 자연스럽게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립으로 투자와 고용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시내 도로, 철도, 항만, 용수, 전력 등의 확충으로 건설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도시내 아파트,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의 조성으로 발생할 건설효과와 함께 건설부문의 경기진작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모범적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특히 산업의 지역유

치와 발전으로 수도권 유입인구와 시설확장이 중단 차단되어 수도권의 집중이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 공급확대와 가격안정으로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도시 건설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를 시산해 보기로 하자. 500만평 규모에 IT(Information Technology) 등 첨단산업이 위치하는 기업도시 건설을 전제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본다. 통상 초박막액정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TFT-LCD, 이하 LCD)나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투자에는 연 6조원 규모의 투자를 3년 정도 지속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시 지구를 조성하고 교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100만평당 2조원씩 약 10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도시 지구지정을 받고 산업시설 투자와 최소한의 교육, 의료, 문화, 레저시설을 만드는데 약 28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공사 소요기간을 3년 정도로 추정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업도시의 경제적 효과 시산은 투자규모를 가정하여 모의시험한 결과로 실제 투자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기업도시 규모는 100만평 미만부터 1,000만평 이상까지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8,800만평 규모 위에 도시 자체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도 있고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규모가 66만평 불과하지만 잘 집적된 도시도 있다. 향후 우리가 건설할 기업도시도 기업도시에 들어갈 산업유형, 도시의 규모, 주변여건 등에 따라 투자규모는 다양할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시 예상되는 첫번째 효과는 산업시설의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효과를 들 수 있다. 산업에 따라 투자효과가 차이가 있지만 2000년

1) GSM은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이동전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CDMA와 디지털 이동전화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GSM은 1982년 유럽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 산하 GSM(Group Special Mobile)에서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규격을 설정한 것이 효시이다. 1989년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로 이관돼 범유럽 표준규격으로 제정된 GSM은 협대역 시분할다중접속(TDMA) 방식을 적용, 유럽 17개국을 단일통화권으로 묶게 됐다.

〈표-4〉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구조(2000년)

투 자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1인/10억원)
	1.583	0.654	16.1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일정액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전산업 평균 ① 생산유발효과, ② 부가가치유발효과, ③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투자 한단위의 수요가 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효과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로 투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투자 한 단위의 수요가 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효과를 말한다. 취업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계량적으로 나타낸 수치이다.(〈표-4〉)

통상 산업구조는 단기간에 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000년 산업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2000년 구조를 가지고 투자의 제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시설에 대한 18조원의 투자는 28조 4,940원의 생산과 11조 7,72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고용면에서도 28만 9,800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시 예상되는 두 번째 효과는 기업도시 대상지역을 도시로 조성하면서 얻게되는 건설효과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00만평 규모의 토지를 도시개발을 위해 조성작업을 할 경우 100만평당 2조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부지조성을 하고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최소한의 시설을 조성하는 기준으로 500만평에 대해 10조원의 직접적인 건설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10조원의 건설활동은 이를 통해 9조 7,436억원의 타산업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설투자로 인한 총생산효과는 10조원의 건설활동비용과 9조 7,436억원을 합친 19조 7,436억원에 달한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2,902억원, 고용은 16만 1,159명의 GDP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도시 건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투자가 가져다 주는 효과 이외에 많은 간접효과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투자효과로 산업집적화 효과를 들 수 있다. 산업집적화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을 특정공간에 집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 이 공간에서 네트워크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경쟁력을 확보된다. 특히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면 기술진보에 따른 진화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특정한 산업이 쇠락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동안 압축성장을 해오다 보니 수도권에 많은 자원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갖는 차별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업도시가 지방에 위치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완하는 방안이 된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족형 도시의 출현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인구를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은 해당지역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내 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투자에 따라 지역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은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업도시 건설은 가라앉아 있는 기업가의 투자마인드를 회복시키고 자력적인 경제회생이 어려운 지역경제회복의 열쇠를 제시하는 효과를



〈표-5〉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투자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
산업시설투자효과	18조	28조	12조	290,000명
건설효과	10조	20조	8조	161,000명
산업집적효과	-	-	-	-
지역균형발전	-	-	-	-
주택가격안정	-	-	-	-
경기부양효과	-	-	GDP 1~2% 증가	취업자 1~2% 증가
합계	28조	48조	20조	451,000명

주: 생산유발액은 중간재를 포함한 산업전반의 효과, 부가가치 효과는 GDP 개념의 효과, 고용유발인원은 (인/10억원) 기준효과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추정

연계 된다.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도시들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후속 건설투자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는 건설투자를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최소한의 투자에 국한시켰지만 실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로 인한 많은 개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 분석이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도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낮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여 2002년 전후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강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건설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도시 건설은 산업시설 투자를 전제로 한만큼 시설투자의 효과위에 건설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투자도 단순한 주택건설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건설로까지 확대되어 건설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이 갖는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시설투자효과, 건설투자효과, 산업집적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도시의 완성과정에서 지속될 건설투자 효과 등이 기대된다. 앞에서 시산한 제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해 보면 〈표-5〉와 같다. 가장 분명한 경제적 효과는 결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직결된다. 계량화하기 곤란한 효과를 제외하고 수치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초기 3년 2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결과 3년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 1~2% 포인트, 고용 1~2% 포인트가 증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금 침체된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5. 결 론

기업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기업들의 투자하려는 의지, 지자체의 유치노력 등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는 너무 많은 제약요인으로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성공적으로 건설·운영되는 해외 기업도시들의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도시

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비전공유와 기업도시 기획 및 개발 추진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발전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구성주체들이 공유하는 비전에 따라 실제로 추진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체제(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 맞는 유일한 개발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 기업도시의 형성목적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국가건설을 위해 한국의 경쟁우위의 창출이 시급하다. 기업도시도 30년 이상 앞선 선진지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경쟁우위 창출이 곤란하다. 한국적 경쟁우위를 발굴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형태로 한국적 경쟁우위를 촉진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쟁우위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규모 투자 능력에 있다. 여기에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대학의 연구개발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핀란드 오울루시 개발 사례는 인재가 기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재를 따라가는 형태이다. 또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사례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대학과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관련 기업과 인재가 집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체제의 개선과 유기적인 산학협력체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도 지역의 특성과 산업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업도시 건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기업들의 경우 투자부진이 돈이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강한 도전정신이나 기업이 정신도 노사문제나 각종 규제 등으로 활력을 잃는 실정

이다. 이제 기업, 정부, 국민 등 모든 경제 참가자가 어떻게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를 이끌어낼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때다.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는 방법은 기업들에게 투자할만한 매력있는 투자상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 기존 제도를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낼 수는 없다. 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투자를 유인할 상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중인 특별법도 이런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장설립, 노사, 교육 및 의료, 체육시설 등 관련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몇가지 개선만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의를 고취시키지 못하고 기업도시 건설도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도시 건설은 참여하는 기업에게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사업이다. 몇 백만평의 부지개발, 수조원대의 자금조달 등 한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몇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여러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케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투자 활성화로 GDP가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산업시설, 지원시설, 생활시설 등의 건설효과로 유발되는 경기부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규모 투자의 전후방 연관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모처럼 제시된 이런 제안도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루기 어렵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면, 투자가 증가되어 일자리가 늘고, 선진경제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